

새정부의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언

백 윤 성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장

들어가며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제1순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41개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대통령 선거전부터 '창조경제'라는 국정키워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하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창조경제를 설명했다. 창조경제는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용어 같기는 하지만 간단치 않은 개념이다.

창조경제는 2000년 8월 비즈니스위크지의 칼럼에 처음 소개된 후 이듬해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펴낸 『창조경제(2001년)』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호킨스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디자인, 영화와 음악 같은 창조적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창조산업'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경제의 동력은 자본이 아니라 창조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등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경제론을 제시한다"고 말했던 것은 존 호킨스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있다. 이스라엘 출신 언론인이 이스라엘 과학기술에 기반한 두뇌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추적한 『창업국가』란 책이다. 핵심은 벤처와 창업을 통해 적은 인구, 빈약한 영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내용이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창업국가로서의 국가발전전략, 기초원천기술개발,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CT, 벤처 육성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과제

모두에 서술한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지향에서 고용률 지향으로, 양적성장 추구에서 질적성장 추구로 나아간다는 3가지 핵심방향도 정해졌다. 현재 기대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창조형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한국형 콘텐츠산업 창조,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과학기술·문화산업 메카 육성 등이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경제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5년간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정책 방향설정에 대해 함께 모색코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방향〉		
분 야	현 재	미 래
경제성장모델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 (고용률)
	수출·제조업·대기업중심 불균형 성장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조성이 필수적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은 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수 있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공약에 있어서도 창조산업 육성, 창조·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창업·벤처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허술하고 미흡하다. 연구기관·대학등의 전문가로서의 창업·벤처도 정책적 지원 부족과 자금 부족,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창업실패를 이룬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물며, 청년창업은 더할 나위 없다. 외환 위기를 지내면서 우리나라에 불었던 벤처열풍이 현재는 ‘어려운 성공’으로 점철되는 만큼 현재에 있어서도 창업과 벤처에 있어서는 여전히 환경이 척박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질적 핵심인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정책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외환위기의 벤처활성화 정책에 대한 세심한 비판적 고찰이 다시금 필요한 때이다.

창업과 벤처활성화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커다란 붐도 있었고, 버블이라 하여 눈먼 투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아직도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의 입안에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기반한 진일 보된 추진전략의 모색이 절실하다

균형성장의 근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나라 보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민경제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경제성장과정은 굳이 돌이켜 보지 않아도 왜 이런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는지, 이것이 왜 국민경제의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기업 또는 산업간의 양극화의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 있어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장은 그동안 많은 실천적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화하며 국정과제중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 다소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어 보인다. 국정의 운영방향으로는 적절하겠지만, 이를 실제로 정책화하여 현실경제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 서비스업이 쇠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지역이 쇠퇴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성화, 내수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의 근간이 바로 지역경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운영방향이 없다면 이는 바로 또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수 및 중소기업의 육성 목적이 수출 및 대기업중심의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과 양극화만의 문제만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 즉,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성장이라는 것은 모두 같아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특성화에 기인한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경제민주화?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역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만 비로서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던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시장지배력 제한 등의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금번 18대 대통령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구호가 '경제민주화'였지만 인수위의 국정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우선 5대 국정 목표에도 경제민주화란 표현 자체가 사라졌다.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 이름으로 창조경제의 하위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인수 위에서는 ‘경제민주화’ 보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상위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논쟁거리를 낳고 있다.

어쨌든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작동한다. 이러한 바탕하에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현실은 완벽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모든 주체가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다면 정책의 변화로 인해 또다시 규제완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가며

박근혜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면서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득표 대통령이 라는 국민적 신뢰를 안고 출범했다. 그만큼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이 많다. 그동안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불안감, 고용불안과 청년취업의 한계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한국사회는 복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선진국을 모방해 따라가는 부가가치가 낮은 추격형 경제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형 선도 경제로 변모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에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실현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교육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중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지역판 ‘창조경제’ 추진방안을 모색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기 내에 창조경제의 결실을 보기 위해 또 다른 개념과 투자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투자 대상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여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표 달성에 가장 빠른 길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또 다른 정부와 구분짓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2.

창조경제에서 미래를 찾다, 이코노미 조선 101호, 2013. 3.

[특집 : 경제민주화 없는 복지] 박근혜는 왜 '창조경제'를 선택했나, 주간경향 1016호, 2013.3.12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방향〉

국 정 목 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